

배포 일시	2023.1.18.(수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책임자	단 장 김성호 (044-201-3589)
	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	담당자	사무관 허예원 (044-201-3595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부·검찰·경찰 「전세사기 대응 협의회」 개최

-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오늘(1. 18.)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·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, ‘유관기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’를 구축하여 ‘형사절차의 쏠과정’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「전세사기 대응 협의회」를 개최하였다.
- 국토부 토지정책관(고위공무원 남영우)과 대검찰청 형사부장(검사장 황병주), 경찰청 수사국장(치안감 윤승영)은 오늘 협의회에서 ‘대규모·조직적 전세사기’를 근절하기 위해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- ▶ 「검·경·국토부 협의회」를 개최하여 수사 초기부터 정보 공유 및 다각적 분석
- ▶ 「7대 권역 검·경 지역 핫라인(hot-line)」을 구축하고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‘빌라왕’ 등 대규모·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신속·철저하게 수사
- ▶ ‘피해회복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,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쏠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
- ▶ 「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」을 지속 시행하고, ‘범죄의 근원’을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

-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I

협의회 개요

- 일시 · 장소
 - 2023. 1. 18.(수) 14:00 ~ 15:00,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
- 참석자
 - 국 토 부 : 토지정책관 남영우,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등
 - 대검찰청 : 형사부장 황병주, 형사1과장 등
 - 경 찰 청 : 수사국장 윤승영, 경제범죄수사과장 등

II

개최 배경

- '서민'과 '청년' 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전세사기로 잃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,
 - 국토교통부와 검찰·경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음
- ▶ '22. 7. 11. / 10. 14. 대검찰청, 2회에 걸쳐 일선 검찰청에 전세사기 엄정 대응 지시
 - ▶ '22. 7. 25. 경찰청·국토부, 「법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」 6개월간 실시
 - ▶ '22. 8. 24. 국토부,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 4천건 공유
 - ▶ '22. 9. 28. 경찰청·국토부 간 전세사기 공조 업무협약 체결
 - ▶ '22. 10. 13. 법무부, 전세사기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지시
 - ▶ '22. 12. 20. 국토부,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
- 그럼에도, 소위 '세 모녀 전세사기', '빌라왕', '건축왕'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·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·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,
 - 전세사기 엄정 대응을 위해 「검·경·국토부의 차원이 다른 긴밀한 협력」 필요

Ⅲ

주요 내용

- 국토부·대검찰청·경찰청 「전세사기 대응 협의회」 개최
 - 정부가 ‘전세사기에 총력 대응’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인 검·경·국토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종합 공조·협력하는 협의회 개최
 - 전국 단위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‘삶의 기반’ 을 무너뜨리는 ‘전세사기 배후세력’ 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행의 전모를 규명
 - *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, 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·경이 공유하고, 종합적인 조사·분석을 토대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하여 배후세력까지 수사
- 전국 7대 권역 「검·경 지역 핫라인(hot-line)」 구축
 - ①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(서울·인천·수원) 및 ② 지방의 거점 지역(대전·대구·부산·광주) 총 7곳에 ‘핫라인(hot-line)’ 운영

△ 서울에서는 ‘세 모녀 전세사기’ 사건, ‘빌라왕 배후 신모씨’ 사건, ‘화곡동 강씨’ 사건 등, △ 수도권에서는 ‘건축왕’ 사건, ‘경기 남부 빌라의 신’ 사건 등 대규모·조직적 범행이 발생하고 있고, △ 지방에서도 ‘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 편취 사건’(대구), ‘광주 빌라왕 사건’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거점 지역 7곳 선정

- ‘핫라인(hot-line)’ 을 통해 대규모·조직적·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여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
 - 최신 사례, 법원의 경향 등을 업데이트하여 수사에 반영하고, 필요한 정보를 수시 교환하여 구속, 기소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협력
- ☞ ‘전세사기 전담검사’가 ①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며, ② 경찰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‘구속전 피의자신문’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③ 구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
- 「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쏠과정」에서 긴밀하게 협조
 -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,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검·경·국토부가 유기적·지속적으로 협조

- ①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,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하고, ② 다수 피해자 발생시 ‘경합범 가중’에 따라 ‘법정 최고형’까지 구형하는 한편, ③ 구형 미달 선고시 적극 항소

○ 범정부 전세사기 단속 지속 시행

- 기존 단속에 참여한 경찰·국토부 외에 검찰도 참여하여 「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」을 지속적으로 실시
-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‘범죄의 근원’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

담당 부서 <총괄>	대검찰청 형사1과	책임자	과 장 임일수 (02-3480-2260)
		담당자	검 사 송규영 (02-3480-2905)
	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	책임자	단 장 김성호 (044-201-3589)
		담당자	사무관 허예원 (044-201-3595)
	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	책임자	총 경 김종민 (02-3150-2037)
		담당자	경 정 김현수 (02-3150-2168)